
위원회별 주요 국정과제 추진현황

1. 동북아시아위원회	1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5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9
4.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14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8
6.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1
7. 교육혁신위원회	25
8.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9
9.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33
10.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37

동북아시대위원회

1. 비전과 전략

□ 비전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건설

- 『하나되는 동북아』 : 대립과 갈등 분역의 역사를 청산하고 신뢰, 호혜, 상생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를 지향
- 『네트워크 동북아』 : 단절과 대립을 넘어 사람·물자·정보의 역내 네트워크 구축
- 『열린 동북아』 :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동북아 역내국 뿐 아니라 역외국가들의 동참을 환영하는 동북아
- 『함께하는 동북아』 :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고 역내 시민간의 교류와 연대가 발전 동력이 되는 동북아

□ 추진전략

○ 우리의 전략적 역할

- ‘가교국가’ 역할 :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이어 통합과 협력의 새 질서를 창출하는 가교 역할 수행
- ‘거점국가’ 역할 :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이디어의 중심 (비전 제시자)이자 역내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 ‘협력국가’ 역할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역내 협력의 촉매 역할 수행

○ 전략적 운용원칙

- 동시병행 연계, 중층적 협력, 개방적 지역주의, 공동체 지향

2. 그간 추진실적

본 위원회는 동북아시대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기획, 평화구축 과제, 번영 구현 사업, 공동체 구현을 위한 협력사업 등 4개 영역에서 주요 과제들을 설정하고 추진 중

□ 동북아시대 구상의 기본 추진전략과 방향 제시 및 주요국가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 수행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04.8)을 통해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번영과 평화 연계전략의 기본안 제시
- 주변 4국에 대한 중장기 대외전략 기본구도 검토

□ 동북아 평화구축 과제 추진

- 주변 4국과의 인적네트워크 현황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대화 설치 준비
-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거점 개발전략 검토 및 수익모델 연구
- 동북아 평화거점화 사업 추진(제주특위 구성·운영) 및 동북아 포럼 구성 준비

□ 동북아 공동체형성을 위한 협력전략 수립

-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방안을 수립(‘04.9)하여 대러 에너지 협력 전략 및 세부 추진전략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다자간 철도협력 추진방안 및 한·러 철도협력 전략 검토
- 한·중·일 역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동북아 공동체 구현 측면에서 접근하여 검토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 '03.12월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후, 주요 정책 과제 세부추진계획안 마련 및 추진실적 점검
 - 재정경제부와 함께 한국투자공사(KIC) 설립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융전문인력 양성방안 등 검토
- '03.8월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을 통해 비전과 전략 및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세부과제 기획 및 추진실적 점검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마련('04.8)하고, 국제물류 지원을 위한 통관·물류제도 등을 지속 개선('03.12-'04.8)
- 외국기업 경영환경 및 외국인 생활환경 등 투자환경 개선 중장기 대책을 수립('04.3)하고 추진실적 점검 중
 - 총 151개 과제 중 '04년 3/4분기까지 완료 42건, 정상추진 75건, 중장기 추진 34건

* '03년 기계산업 유치전략 수립 및 독일 ThyssenKrupp그룹 유치('04.2)

3. 향후 중점추진 분야 및 과제

-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구현하기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구체적 성과 시현
- ◇ 전략기획, 평화구축, 공동체형성의 구체적 로드맵 완성
- ◇ 금융, 물류 등 로드맵이 기 마련된 과제는 추진과제별 실행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되, 중점추진과제에 역량을 집중

□ 동북아시대 구상의 전략 구체화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차원에서 주변 4국과의 중장기 외교·안보·경제 전략 보고서를 마련
- 동북아의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한 안보공동체와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공동체 구성방안 검토
 - * EU통합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전략 구체화

□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 동북아 구상에 대한 대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변 4국과의 국별 '전략대화' 설치·운영
- 동북아 다자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지원 방안 강구
- '동북아 평화연구소' 설립 및 '제주평화포럼('05.6)' 지원

□ 동북아 공동체형성을 위한 협력

- 동북아 경제협력 네트워크구축 전략 구체화
 - 동북아 철도협약체 구축 추진
 -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축 및 대북 에너지 협력 방안 마련
- 동북아 사회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동북아 시대 체험프로그램 개발

□ 동북아 금융·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세부 중점과제 정책화

- 금융/물류 전문인력 양성방안 확정 및 정책화단계 완료
- 민간 T/F의 금융규제 및 감독 개선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05년 상반기 중 정부차원의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 공·항만 배후단지의 전략적 개발방안 및 내륙물류거점시설 체계의 합리화 방안 마련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특위활동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1. 비전과 전략

□ 정부혁신의 비전 : “21세기 혁신국가”

- ① 정부, 기업, 국민 개개인 모두가 혁신하는 국가
- ② 혁신자동장치가 구축되어 적응력이 뛰어나고, 혁신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국가
- ③ 모든 구성원 잠재능력을 극대화하여 국가 IQ, EQ를 극대화하는 국가

□ 21세기 혁신국가의 『7大 컨텐츠』

- ① 평가와 감사 : 스스로 문제를 파악, 혁신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만들
- ② 투명성 : 문제점이 낱알이 드러나고 혁신기제가 강화
- ③ 개방성과 참여 :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문제인식과 혁신
- ④ 사고와 문화를 바꾸는 혁신문화의 구축
- ⑤ 자율과 분권 : 변화대응력 제고, 모두 최선을 다해 정부 IQ, EQ 극대화
- ⑥ 전문성과 효율성 :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 증진
- ⑦ 교육훈련과 학습조직구축 :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교육과 훈련 필요

□ 혁신성공의 3대 요소

- ① 최고책임자의 의지와 열정
- ② 혁신전문가의 도움
- ③ 인센티브와 문화의 활용

2. 주요 추진실적

- 각부처 인사·조직 업무의 자율권 확대('03.7)
 - * 행자부/중앙인사위 ⇒ 각 부처, 장/차관 ⇒ 실·국장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03.12)
- 여성, 이공계, 장애인, 지방출신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채용목표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사회형평적 인재등용방안」 발표('04.2)
- 각 정부기관 예산의 편성시 각 부처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도입('04.2)
-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과기부의 국가 R&D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능은 각 부처로 이관('04.5)
- 지역특성에 부응하고 주민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생활과 예방치안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확정('04.9)
- 자치단체에 이양시 행정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27개 중앙행정기관 사무의 지방 이양 결정('04.10)
- 외교수요 변화에 따른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교통상부 개편방안」을 확정('04.11)
- 고충민원의 처리역량 및 권익구제 향상을 위해 「옴브즈만제도」 강화 및 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 설치방안 마련('04.11)
- 자율적 혁신활동을 지원할 「정부혁신관리 매뉴얼」 발간('04.12)

3. 향후 중점추진 분야 및 과제

가. 2005년도 추진 방향

- 2005년은 과제 대부분이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각 부처의 혁신 활동이 보다 가속화되는 본격적인 '혁신 확산기'에 진입
 - ※ '03년 : 로드맵작성(기획)→ '04년 : 방안확정(정책화) → '05년 ~: 추진(실행)
- 실행단계에 진입한 과제는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 실시
- 일부 방안확정에 시간이 필요한 과제는 가급적 조기 마무리

나. 2005년에 확정할 주요과제

☐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 개방과 경쟁을 통한 실·국장급 공무원 역량 강화, 중앙행정 기관간 협력행정 강화를 위한 고위 공무원단 제도로입방안 확정 (2006년 실시 예정)

☐ 총액인건비예산제도 도입

- 인적자원관리 강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처 자율적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예산제도 도입방안 확정

☐ 조세체계 개편

- 조세제도의 합리적 조정, 세제의 합리화, 목적세 폐지 및 세목 정리
-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마련, 지방소비세 신설 검토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의 유사·중복 기능 조정
- 중소기업, 노동, 통계, 건설교통, 해양수산, 산림, 환경, 보훈, 식의약품 9개 분야 우선 검토

☐ 교육자치제도 개선

- 교육자치 행정과 일반 자치행정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일반 행정의 교육자치 지원 기능을 강화

☐ 고등고시 시험방식 개편

- 토론회 등을 거쳐 정부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다. 실행단계 과제의 관리강화

☐ 실행단계에 있는 과제가 법령정비 등 구체적 추진과정에서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점검 실시

* 외교통상부 혁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자치경찰제 도입, 평가인프라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통합전산환경구축, 전자정부 법제정비 등

☐ 추진단, 공동 위원회, 시범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행 단계의 과제를 관리

☐ 각 부처의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과제별 주관부처와 선도부처를 지정하여 성공사례를 발굴, 타 부처에 확산하여 혁신을 가속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

□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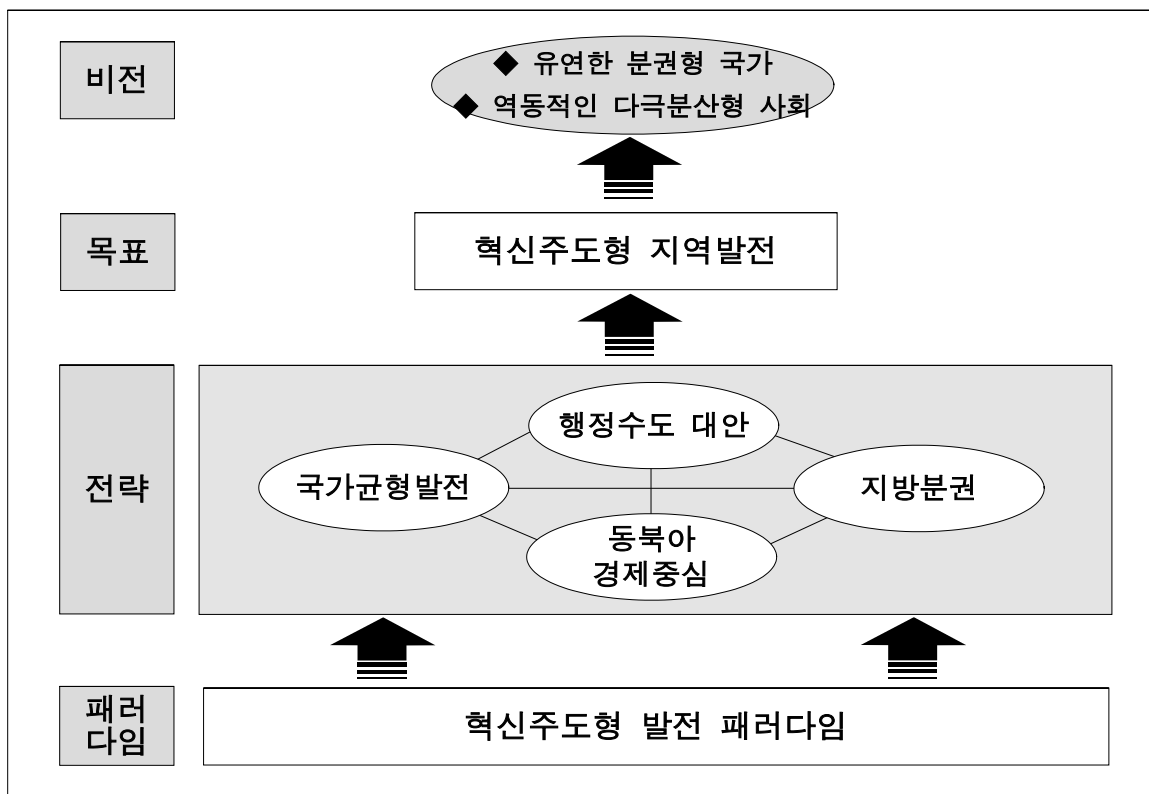
- 유연한 분권형 국가 및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의 건설을 통해 국가재도약 실현

□ 목표

-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에 의한 자립형 지방화 추진

□ 접근전략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발전방안을 통해 국가전체의 발전을 도모
- 통합적 접근 : 행정수도 대안,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2. 주요 추진실적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12월) 및 시행(4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직 설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실무조직) · 국가균형발전지원단(산자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 종전 부처별 칸막이식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유도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환점 마련

* '05년 정부예산(안) 균특회계 : 5.5조(혁신계정 1.3조, 개발계정: 4.2조)

□ 국가균형발전 마스터플랜(Master-plan) 수립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 시행(8월)

- 계획 수립 시 종래 정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자체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반영, 지역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 신국토구상 발표를 통한 지역 균형과 통합발전상 모색(1월)

- 2020년 미래 국토발전을 목표로 혁신형 · 다핵형 · 네트워크형의 새로운 골격 설계

□ 국가균형발전정책 주요과제 추진

○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및 활성화

- 14개 광역 지역혁신협의회 구성(5월) 및 36개 기초 시군구 협의회 구성 중(11월)
- 지방대학 역량강화(NURI) 사업, RIS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국 지방대 및 관련 연구소, 기업을 지원하여 지역내 산학협력 및 혁신 네트워크 구성 지원

○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형성

- 대덕 R&D특구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3월) 및 특별법 제정 추진 중
- 혁신클러스터화 시범 국가산업단지 7개 선정(창원, 구미, 울산, 광주, 반월·시화, 원주, 군산) 및 육성방안 수립 중

○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

- 4개 지역(부산, 경남, 대구, 광주) 2단계 사업 및 9개 지역 진흥사업 등 지역산업 진흥을 지속 추진

○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 신활력지역 개발방안 수립(7월)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9월)

○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방안 마련

-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8월)

3. 향후 중점 추진분야 및 과제

가. 균형정책

☐ 신활력지역의 개발 촉진

- 신활력지역 개발방안을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시행을 통해 낙후 지역을 활성화

☐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차질없는 추진

-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
- 내년('05년) 상반기에 이전 대상 확정, 협약 체결 등 세부 절차 진행 예정

나. 혁신정책

□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및 활성화

- NURI 및 RIS 시범사업 등 지역내 산학협력 및 혁신 네트워크 구성 지원 사업 확대
- 국내외 지역혁신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군·구 협의회 구성 및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지원
- 지역혁신박람회 연례 정기적 개최('04년 제1회)를 통하여 지역 혁신 사례 전파 및 상호 학습과 공유의 장을 마련

□ 산학협력의 확산 및 효과 도출

- '04년에 이어 산학협력중심대학, 지방연구중심대학 등의 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속 추진
- 미국 UCSD 프로그램 등 선진 기술중개모델 시범 도입을 통해 기술거래를 통한 벤처 및 연구소, 대학기업 적극 육성

□ 혁신클러스터 육성

- 대덕을 R&D 특구로 지정, 육성본부 구성 및 각종 지원을 통해 세계적 R&D 상업화 지구로의 성장 토대 마련(*현재 법 제정중)
- 창원, 군산 등 7개 시범 클러스터 지역 및 오송, 오창 바이오클러스터도 세계적 클러스터로 추가 육성할 계획

다. 특화정책

☐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 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한 실적평가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 4개 및 9개 지역사업 내실화

☐ 지역특화발전특구 시행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시행으로 지역별 특성화 제고

라. 신수도권 발전정책

☐ 신수도권 발전방안 수정·보완

-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금년 발표(8월)한 수도권 삶의 질 향상 및 인구 안정화,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수정 중

마. 제도운영 및 성과관리

☐ 국가균형발전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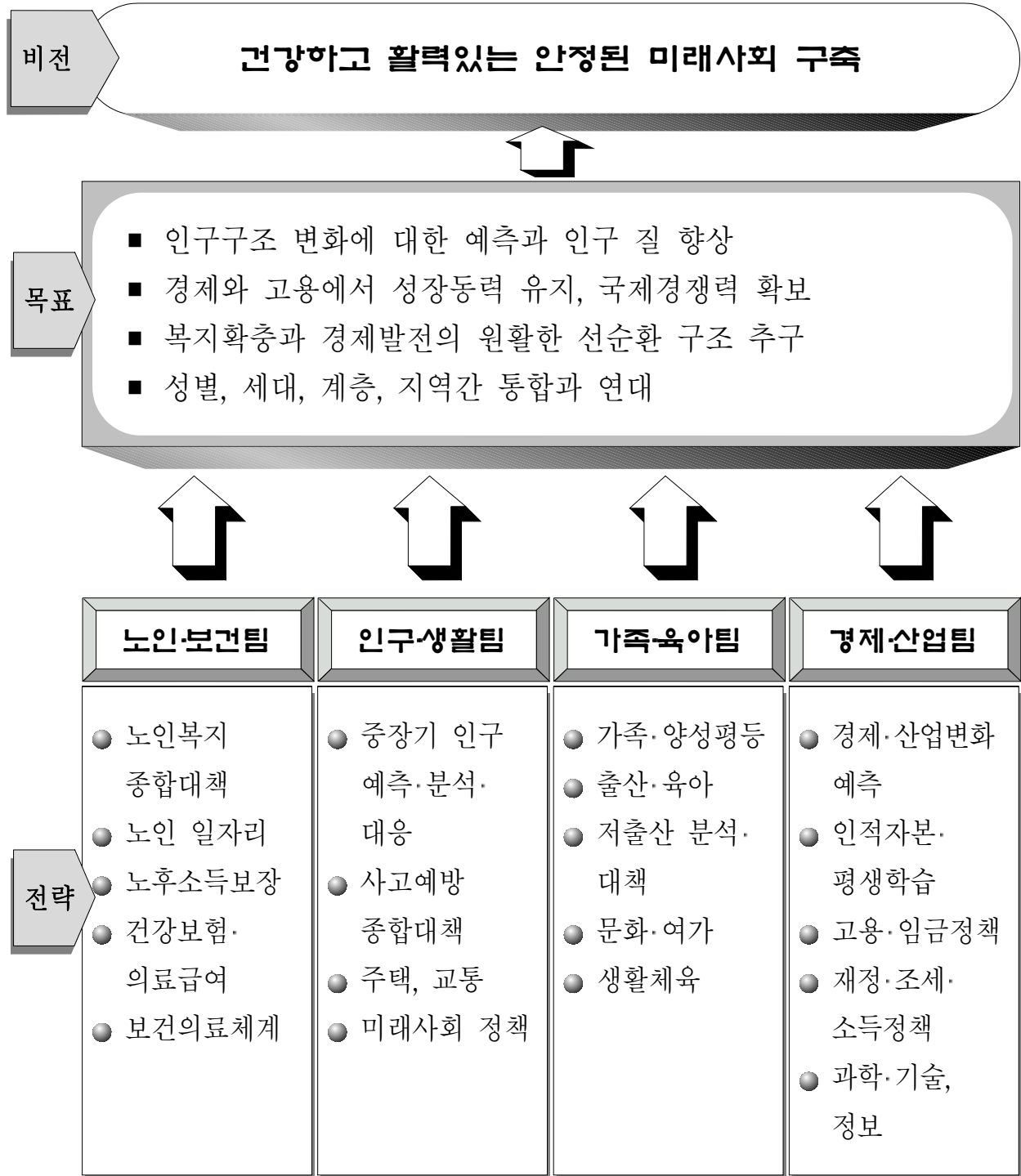
- 매년 중앙 정부 및 지자체별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 집행하여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추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내실있는 운영

-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낙후지역개발계정 사업 관련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 추진
- 지자체별 여건(재정상황,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한 지자체별 재원 배분방식을 검토, 도입
- 정부사업의 안정적 재원조달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역발전투자 협약제도를 시범 도입, 해당 지자체와 협약 체결 예정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1.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비전과 전략



2. 주요추진실적

□ 육아지원 정책 추진

- 미래인력양성 및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위해 시설확충 및 육아비용 경감 추진
 - 시설위주의 정부지원금을 아동별지원으로 단계적 확대, 보육서비스 품질에 따른 부모의 선택권 확충으로 보육만족도 제고
-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 국정과제보고(6.11)이후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보고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중
 - 조사내용 : 가구조사, 보육시설, 유치원의 시설조사, 표준보육 및 교육비용 산출, 적정부담비율, 재정소요추계 등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방안 마련

- 고령화에 따른 상품·서비스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성장산업으로 육성코자 전략방안 마련 추진
- 8개 산업별 활성화 전략품목선정, 전략품목의 산업화방안 도출 및 정부의 활성화 지원전략 등 마련
 - 8개 산업부문 :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 노인일자리 창출

- 숲·생태해설, 간병도우미, 거리환경 개선 등 노인의 능력·경험 등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일자리 제공
- 시·도주최 실버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정보제공 및 취업확대

□ 평생건강관리체계 등 국민건강증진방안 마련

-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방안 추진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개방 등 생활체육활성화방안 마련

3. 향후 중점추진분야 및 과제

가. 노인복지분야

☐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 경제·노동단체 등 8개 단체 및 재정부·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마련

☐ 노인일자리사업 재정비 방안

- 지역여건 및 노인특성에 맞게 노인일자리 30만개 달성을 위한 인프라정비 및 사업재정비방안 마련

☐ 노인복지종합대책

- 고령화시대의 목표와 비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고령사회대책 마련

나. 출산 및 육아지원분야

☐ 출산 및 육아지원방안

- 육아지원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육아지원방안」 마련
 - 보육시설배치 및 보육단가 조정, 육아지원 제도개선 등

☐ 저출산종합대책

- 사회전반에 걸친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
 - 경제, 성(젠더), 교육, 이민정책, 가족지원, 모성보호,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사회보장, 노동시장, 보건의료 등 각 분야를 종합 검토

다. 고령화와 관련한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 분야

□ 고령사회의 노동력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산업발전방향

- 미래의 산업발전과 노동력 수급의 상호연관관계 분석
- 고령친화적이면서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산업활성화방안 마련

□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 및 임금체계 방향수립

- 노동시장에서의 중고령근로자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유지하는 방안
- 이를 위해 고용 및 임금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제도개선 추진

□ 생애단계별 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

-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체계 정비
- 구체적으로 직업지도 및 직업교육 강화, 직장생활과 학업과의 연계강화, 중고령자 경력개발 및 활용, 은퇴근로자의 적극적 사회참여 방안 등 마련

□ 노동력일실방지를 위한 사고예방종합대책

- 가정, 산재, 도로사고의 종합적 파악
- 사고로 인한 사망·장애 등 피해파악과 사고장소 및 원인분석
- 건축, 도로, 산업장 등 위험요인파악 및 개선대책 수립

라. 미래사회 분야

- 미래사회의 주요변수로서 ①저출산·고령화등 인구구조변화 ②세계화 ③지식정보화 ④성역할 및 가족관계·생애주기변화 ⑤문화적 변화를 상정하여 미래사회모습을 분석·예측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노동시장, 산업구조, 재정, 조세부담률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

⇒ 상기 두 흐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0,2020년경의 우리사회의 미래 모습예측을 위해 작업팀을 구성하여 진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전략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 UN은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의제21실천계획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 권고
 - 1999. 4월 환경단체 등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정부에 요구
- 2000. 9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제3기 위원회 출범('03.12), 국정과제위원회로 그 기능을 확대

□ 지속가능발전 4대 목표

- 활력있는 경제와 높은 삶의 질
-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 사회
-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 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민통합

□ 추진전략

- 국가 주요 중·장기계획 수립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
- 물, 에너지, 국토정책 등 분야별 지속가능발전정책 수립 및 추진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갈등관리프로세스의 개발·적용

2. 그간 주요 추진실적

□ 정부의 주요 중·장기계획(39개)에 대한 사전 검토

-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안),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보완(안),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정비기본계획 보완(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지속가능성 보안을 위한 자문의견 제시

□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안) 마련

- 댐관리정책, 물수요관리, 유역단위 홍수대책, 농어촌도서지역 식수문제 해결, 유역통합 물관리, 물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장기정책자문안을 준비
- 2005. 1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 예정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여 국정과제회의(제48차, '04. 6.24) 보고

- 2015년 기준 에너지 10% 절약 목표설정, 2011년 신재생에너지를 총 에너지의 5% 보급 목표설정 등 장기에너지정책 목표설정 및 정책제안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개발간 상충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국정과제회의(제38차, '04. 2.12) 보고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
- 갈등관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보고후 국무총리실에 이관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행자부·건교부·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입법추진팀 구성·운영 중

3. 향후 중점추진 분야 및 과제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 경제·사회·환경부문 등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이와 연계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비전 발표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여건 및 실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론·철학·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이행방안 등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연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 발표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제21 활동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도 함께 제시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과 이행성과 UNCSD 보고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및 산업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협약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05. 2)
 - 에너지수요관리 로드맵 작성,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목표 설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05.10)
 -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을 이용한 생태친화적인 신산업육성과 전통산업의 생태친화적인 생산구조로의 전환 등 제안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정책·사업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갈등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도출
 - 국토개발, 환경, 해양, 에너지 등 7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안 작성 및 부처·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갈등관리지원센터 설치, 갈등관리교육 등 지원

□ 정부의 주요 중·장기계획 및 주요 현안과제 검토

- 정부의 주요 중·장기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주요 중·장기계획 사전 검토
- 주요 개발사업 등 환경이슈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및 자문의견 제출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1. 사회정책 추진환경과 목표

○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환경

- 산업,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확산된 결과 소득 및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고령화 및 저출산 추세가 급속히 확대되어 새로운 사회정책 수요 발생

○ 환경변화의 의미

- 양극화 문제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 지속되는 빈곤층 문제가 내수회복 및 생산력 강화에 장애로 작용
- 전통적 복지와 함께 고령화 · 저출산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해결해야 함

○ 목표

- 사회통합과 성장촉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
-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이 과거에 마무리되었어야 하는 전통적인 사회정책 과제와 함께, 근로빈곤층 지원 및 저출산 대책 등의 현재형 사회정책 과제를 동시에 추진
- 불합리한 차별문제가 '시장기제'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 투명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에 필수적인 전달체계를 정비

2. 주요 추진실적

-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제 수립 및 점검
- ☐ 매입임대주택 도입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 확대계획의 수립
- ☐ 차별시정의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 수립
- ☐ 장애인·여성 등의 고용확대 방안 수립
- ☐ 빈곤아동종합대책 수립
- ☐ 사회적 일자리, EITC 등 근로빈곤층 종합대책 수립
- ☐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1단계 대책 수립
- ☐ ESOP 확대 방향 수립
-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분야별 과제 수립

2. 향후 중점추진 분야 및 과제

가. 추진방향

- ☐ 이미 수립된 분야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평가하고 시행여건 조성
- ☐ 아직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지 못한 분야는 상반기 중으로 과제를 확정하여 추진

나. 기 수립과제의 원활한 추진

☐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중간평가 및 참여정부 내 주거복지정책

달성목표 재점검

☐ 6대 차별시정 추진계획 관리 및 차별시정기구 효율화

- 분야별 차별시정 과제 추진 점검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따른 관련 입법조치 마무리
- 일원화된 차별시정기구를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홍보 추진

☐ 장애인, 여성 등의 고용확대방안 점검과 보완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수립
- 적극적 고용평등 프로그램 확대

☐ 빈곤아동 대책 후속조치 점검 및 보완

- 아동의료지원대책, 조기개입 정책, 학비 및 장학금 지원대책 등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준비
- 사회적 일자리 영역발굴 및 확대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보완

☐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서민생계 안정대책 보완

- 사회안전망 실태 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다. 신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 확정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대책 마련

- 각종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계획을 확정

□ 공공부조제도(기초생활 보장제도) 효율화 대책 추진

- 의료, 교육, 주거비 지원을 통해 생계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근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 반영
- 빈곤층 밀집지역 우선지원방안과 후속조치과제 관계부처 협의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비 지원방식 개선
- 거리노숙자 등 극빈층에 대한 보호체계 평가 및 정비

□ 빈곤여성 종합대책 마련

- 여성빈곤계층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맞춤형 빈곤종합대책”수립
- 차별화된 여성빈곤정책 마련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양성평등을 위한 대안적 제도 마련

□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대책 마련

-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
- 사회보험 부과·징수의 효율화 및 고용형태 등에 따른 실질적 개선대책 마련

교육혁신위원회

1. 교육혁신의 비전과 전략

- 지금까지 교육혁신의 기본방향 정립에 많은 시간을 할애
 - 분권과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를 강화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
 -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초·중등 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육성된 재능을 전문직업적 역량으로 발전시키는 질 높은 대학교육체제로 재편
 - 초·중·고등학교는 획일적 교육과정,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교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재능, 적성, 소질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
 - 대학은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전문적 인재로 육성하는데 힘을 쏟음으로써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전환
 - 학교의 서열체제 및 개인간 경쟁체제 완화를 통해 학벌사회를 능력사회로 재편
- 이를 바탕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정책과제의 개발을 위해 노력
 - 학교교육체제 혁신, 직업교육체제 혁신,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각 과제별 정책안 마련 추진
 - 그동안,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관련 부처에 제안
 - 정책안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각계 인사들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노력

2. 주요 추진실적

-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점수에 의한 선발경쟁 완화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토대 마련
 -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 53회 국정과제 회의('04. 8. 19)에서 보고한 개선방향을 토대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공청회 등을 거쳐 '04. 10. 28(목) 최종안 확정 발표
 -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높이고, 등급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통해 학생선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
- 농어촌 교육 살리기, 도시영세민 유아교육 발전방안, 건강한 학교 만들기 등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실현 방안 정책제안
 -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한 교육 정책적 배려 필요성 보고('04.1.8) 이후 각 과제별 TF를 구성하여 현장방문,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하여 정책방안 마련
 - 위원회에서 개발한 정책방안을 교육부에서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 계획” ('04. 10. 19)에 포함하여 발표
 - 동 대책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 및 타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정책제안 ('04. 11)
-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교육과정·교과서 현대화 방안,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기초연구 및 의견수렴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

3. 향후 중점추진 분야 및 과제

가.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마련

-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형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특성화되고 유연한 직업교육이 필요
- 개인의 자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 마련
 - 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중학교에 직업체험 주간 (Work Week) 및 진로선택 안내제 등을 도입
 -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지자체, 직능단체 등이 협약에 의한 실업계고교 운영
 - 학교(School)→일(Work)→학교(school)로의 순환체제를 통해 직업인에게 평생직업교육으로서의 학습에 대한 희망을 부여
 - 직능인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장학금, 무상교육, 고용보험, 대학진학시 특전 등)을 통해 직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나.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교육과정 · 교과서 현대화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현재 학교교육과정의 괴리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진로개념을 전면도입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되도록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검정 등에 각계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교과서체제를 검인정제로 전환하는 등 교육과정 · 교과서 현대화 방안 마련

□ 단위학교 교육기획력 제고

-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그 과정과 결과의 평가·기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교사)의 교육기획권과 학생평가권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 교장임용체제 개선

- 학교단위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장의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장 임용체제 개혁을 위하여 학교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장 충원 방안을 마련

다.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개발

□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혁

- 사립대학과 구별되는 국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 목적(Mission)에 맞게 사립대학과 차별화된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 전반적인 운영체제 개선 방안 마련

□ 대학원 연구 경쟁력 강화

- 대학원 연구역량의 고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원의 연구 및 교육의 질적 고도화에 맞는 지원·관리 체제의 개선 도모

□ 교육·학술평가체제 구축

- 대학에 대한 교육·학술 평가를 강화하여 책무성을 제고하면서 교육기관 서열화 등 경쟁을 조장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실제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평가체제를 구축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1. 비전과 전략

(1) 비전과 목표

☐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참여농정을 설계 · 실현

- 농업계 내부 갈등해소,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구심체로서 역할
 - DDA협상등에 대비, 중장기 농어업 · 농어촌 정책방향과 실천계획 제시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 농어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국민적 합의체 기구로서 자리매김

☐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주도

- 농업 :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
- 농업인 :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 농촌 :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2) 추진전략

☐ 농업인과 정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희망찾기 업무에 집중

- 협치농정을 구현, 농민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열린 토론의 장으로 쇄신
- 농(農) · 소(消) · 전(專) · 정(政)간 협의 활성화로 이해조정예 전력

☐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을 합리적으로 조화

- 농업은 시장원리, 농업인과 농촌문제는 소득 · 복지정책으로 대응

2. 그간 추진실적

- ◇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부처와 공동 수립
 - UR이후 투융자 평가와 방향제시로 119조 투융자 토대 마련
- ◇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자급률 등을 적극 논의, 갈등 최소화 도모
 - 농민단체가 정부와 협력·협업하는 분위기 조성, 협치농정 유도
- ◇ 5개 국정과제의 정책화 작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당초 '07년)하여 농업인이 정책추진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

□ 쌀 협상과 국내 대책

- 농민단체장 간담회, 쌀·DDA협상협의회(4회), 공개토론회(2회) 등을 개최하여 쌀 협상의 전략을 제공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쌀 관세화 파급영향 분석, 관세화 선택기준 등 제시
- 쌀 농가소득 안정 등 국내대책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농민단체의 장외성 주장인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을 논의과제로 수용, 식량자급률 목표의 성격 및 수준과 법제화 문제 등에 의견 접근
 - 쌀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보전 방안 제시
 - 수매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등 추곡 수매제 개편안 마련

□ 직접지불제 확충 및 체계화

- 직불제를 3개 유형(소득안정, 다원적기능 제고, 구조조정 보완)으로 체계화
 - 전문가회의(5회), 정책협의회(2회) 등을 개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농지제도 개선

- 농업계의 이념적 문제제기 등 갈등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농지법 개정안을 뒷받침
 - 정책협의회(5회), 분과위원회(2회) 등을 통해 쟁점을 정리, 본위원회 의결('04.7.23)

□ 농업인력 정예화

- 농업인력 수급전망 및 육성방안 마련(10차례 협의회 개최)
 - 수급목표 설정, 후견인제 도입, 지원자금 현실화 등 창업농 육성대책 마련
- 농업인 정의 재정립 관련 전문가회의 및 정책협의회 등 4차례 개최
 - 농업인 정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가 유형별로 정책차별화 방안 제시

□ 농어촌 사회 안전망 및 기초 복지 인프라 확충

- 농산어촌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관련 특별법 초안 마련, 부처간 합의도출
 - 이를 기초로 삶의질특별법(농림부)과 복지증진특별법(복지부) 제정·공포
- 농산어촌 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농어촌 경관협약제 도입방안 마련
-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를 구성,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위향상,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방안 논의
- 교육감 추천 교대 특별 신·편입학 제도 확대, 주거요건 개선, 수업보조 요원 채용, 수당 확대지급 등 농어촌의 우수 초등학교원 확보방안 마련

3. 향후 중점추진 분야 및 과제

- ◇ 농어업특위 존속기한 연장('04→'07)에 따라 농특위를 개편하여 농업인과 정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희망찾기 업무에 주력
 - 농민단체 참여 속에 운영활성화를 통해 열린 토론의 장으로 쇄신

□ 제1기 농특위 평가를 바탕으로 제2기 농특위의 기능과 역할 강화

- 농민단체와 참여 협약을 체결, 농민단체의 참여를 제도화
 - 농민단체 위원 확대(9→12명) 및 위원을 자체 선정·추천토록 조치
 - 농민단체가 권한과 함께 책임도 다하도록 협치농정 구현에 노력
- 비농업계 인사의 참여확대, 소비자 분과위 설치 등 개혁성 제고
- 부처·농민단체와 정례 업무협의회 신설, 현안문제 사전 조율

- DDA 협상 등 현안대응·조정 원칙하에 정책과제 개발 병행
 -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 협의→제시, 추진상황 점검·평가
 - 독자적 논의과제를 선정하여 부처와 업무중복 방지
 - 국민적 합의·부처간 협의·농민단체의 장외성 주장·피드백 필요과제 등
- 국정과제 보고회의 수시 개최(농어업문제 토론의 장으로 활용)

□ 주요 곡물의 자급률 목표설정

- 수급여건, 경쟁력, 과잉생산 등 부정적 측면과 소득증대, 예산의 효율성, 소비자기호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설정
- '05년까지 주요곡물의 자급률 목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06년까지 모든 식품을 포괄하는 자급률 목표를 제시

□ DDA협상동향 점검 및 국내대책 마련

- DDA협상 결과가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면밀한 분석
- 후속 국내대책 마련, 농어업·농어촌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 보완

□ 농어민단체,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농정을 점검·평가하는 공동추진 협의회 구성·운영, 정책실패 방지

- 119조원(농업)과 12.4조원(수산) 투융자계획의 추진상황 평가, 피드백
- 지역농업클러스터와 농촌종합개발 등 혁신사업의 점검·평가 강화
- 농업부문 5대 국정과제의 집행상황 평가

□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대한 연구방향 및 대책수립

- 자원회복계획에 맞도록 법제정비, 운영시스템 구축 등 추진

□ 기타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협의·논의

- 농어업의 다원적기능 제고, 동북아 농정 구상, 식품산업 발전 및 안전성 대책 등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1. 비전 및 전략

□ 비 전

- 혁신주도형 경제구조 확립 및 합리적 사회시스템의 구현을 통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 목 표

- 이를 위해 기술개발 ⇒ 성과확산 ⇒ 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전략

주체 혁신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의 창의적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 정비

요소 혁신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인력수급의 불균형(Mismatch) 해소

성과·확산 혁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창출된 혁신성과의 전주기적 산업화 촉진체제 구축·지원

시스템 혁신

혁신주체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공유형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가기술혁신 행정체제 효율화

기반 혁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제도·환경·문화적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 발전 추구

2. 주요 추진실적

□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 추진

-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NIS 구축방안 30대 과제」를 민·관 합동으로 수립('04.7)하고, 과기부총리제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04.10) 등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개편
- NIS 구축방안은 과학기술·산업·인력정책 등 미시경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거시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으로서, 다른 나라로부터 관심과 주목의 대상
- 향후 지역혁신을 포괄하는 NIS 구축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의 지속적인 균형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적 마인드 확대와 합리적 사고와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체제 혁신을 도모

□ 기술혁신역량 인프라 강화

-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기술혁신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의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활성화
- 핵심 과학기술인력 양성 차원에서 「우수 이공계 인력 확보방안 및 고교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수립·추진 중이며, 국가기술자격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 국가연구개발 인력·장비·사업 현황 및 성과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확정(제15회 국과위, '04.7)하고, 현재 시스템설계(ISP) 작업 추진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고급연구인력의 병역부담 완화 및 사기 제고
- 특허심사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할 수 있는 특허행정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토대 마련

3. 향후 중점추진 분야 및 과제

가.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우수 인력 양성

☐ 세계 100위권 이내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 차세대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중심대학을 선별하여 집중육성 지원
-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면제 등 전반적인 지원제도 및 연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공학교육 혁신

- 이공계 전공자의 전공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소전공학점 확대 유도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교육 개혁을 통하여 공학교육인증 제도의 확대 및 공학교육 품질관리 강화

☐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제고시키는 첨단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제도를 개선하고, 수학과학교사의 연구지원 및 연수기회 확대

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육성 지원

-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금융 등 기술사업화 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경쟁환경·혁신역량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 집중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

☐ 핵심 부품·소재산업 육성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부품·소재산업을 추가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부품소재 기업과 대기업간 공동개발 유도

☐ 기술혁신 인력 지원 및 양성

-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학위연계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인력 지원 및 양성 강화

다. 산·학·연 협력 및 연계 강화

☐ 산·학·연 협력 활성화 여건 조성

- 참여교수·연구원에게 협력 성과가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대학교수의 산업체 파견근무, 산업계 연구원의 안식년 제도 및 겸임교수 제도 등 산·학간 교류제도 마련

☐ 생산적인 산-산 협력 확대방안 모색

- 대기업-중소기업간 기술개발 컨소시엄 활성화를 통한 기업간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방안 강구

라. 기초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혁신기반 구축

☐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

- 개인 연구자의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상향식(Bottom-up) 자유 공모 과제 비중을 확대

☐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관리체제 구축

- 개인연구, 소규모 그룹연구, 집단연구로 이어지는 기초연구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
- 기초연구 담당기관간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효율성 제고

마.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도

☐ 민간 연구개발투자 지원

-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현재 2.5%에서 3% 수준으로 확대 되도록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 등 지원방안 검토

☐ 대규모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 국가기술혁신역량 강화 목표와 연계하여 공공재원의 전략적 투입 분야를 발굴하고 재원 확충방안을 강구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1. 비전과 전략

☐ 비 전

신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혁신

-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선진사회
- 평생학습으로 혁신이 지속되는 지식사회
- 일과 여가, 가정이 조화로운 건강한 문화사회

☐ 추진전략

- 학습조 도입 및 교대조 개편 촉진으로 직장내 평생학습체계 구축
- 지식산업 육성으로 특허, 디자인 등 전문직서비스 일자리 창출
- 여가문화산업 육성으로 일과 삶의 균형
- 학습·복지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통합
- 범국가적 평생학습 인프라 보강
- 불법 장시간 노동 해소 및 주40시간 근무제 확산

2. 주요 추진실적

□ 4조 교대제 및 직장내 평생학습 기업 실태조사

- 유한킴벌리(YK) 이외에도 260여개 기업이 4조 교대제 채택
 - 포스코,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노동연구원)

□ 뉴패러다임 시범사업 확산

- 유한킴벌리(YK) 모델의 보편적 확대적용 시범사업 실시
- '04년 말까지 15개 기업과 시범사업 추진 합의
 - 3개 기업 성공리 가동(폴무원, 대명화학, UIC시카고치과병원)

<뉴패러다임 채택 기업들의 고용 및 생산증가 효과>

기업	업종	혁신 이전	현재	고용증가율	생산증가율
음성 폴무원 두부공장	식품제조업	3조3교대	4조 3교대 +평생학습	25%	30%
문경 (주)대명화학	화학공업	2조2교대	3조 2교대	42%	27%
서울 UIC시카고치과병원	서비스업	주간 2조2교대	주간 3조2교대 +평생학습	57%(채용증)	매출 30% 증가예상

- '04년말까지 추가로 2개 기업 가동 예정(굿모닝병원, 삼보)
- '05년중 신규 40개 기업/단체/기관 시범사업 실시 예정
- 교대제 확대 기업에 대한 지원금제도 신설('04.10.1)

□ 공공부문에서의 뉴패러다임 확산

- 탄력근무제 실시
 - 현재 재정부, 환경부, 특허청 등 13개 부처 시행중
- 경찰청 뉴패러다임 컨설팅 시범사업 MOU 체결('04.12.20)
 - 교대조 근무제도 개선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 여가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뉴패러다임 사업 추진

- 개장시간 연장 실시(국립박물관 등 8개 기관)
 - 국립 경주·김해박물관 등 '금요일밤의 국보 순례', '토요일밤의 고고학 여행' 등 신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지역문화시설 운영의 다각화
 - 새로운 문화주체인 온라인 동호회와 공공문화시설의 협력모델 발굴
 -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Daum』 공동으로 제1회 인터넷 동호회 페스티벌(TO BE i) 개최(12.11)
- 고궁 일반 관람 확대(경복궁 경회루, 창덕궁 등)

3. 향후 중점추진 분야 및 과제

가. 지식사회 구축

□ 직장내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추진

- 기업내 평생학습조 지원
- 대기업·금융기관과 중소기업 연계형 학습체계 지원
- 공무원 현장학습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지식산업 육성

- 전문서비스직 비중을 18%에서 장기적으로 30%이상으로 확대
 - 전통제조업의 지식산업화 및 노동집약적 지식산업 우선 육성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 설비 대신 사람, 지식에 대한 투자 유도

□ 범국가적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 평생학습 고속도로 구축
 - 산·학·연, 지역 연계 학습협력시스템 추진
 - 기업간·산업간 학습클럽 지원

나. 문화사회 구현

□ 여가문화산업 육성

- 기존 문화재, 공공시설의 야간개방 등 가동률 제고
- 숲, 고궁, 미술관, 박물관, 농촌 등 분야별 문화해설사 양성
- "여가정보 콜센터"를 설립하여 통합형 여가정보서비스 제공
- 기업과 문화시설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문화마케팅 강화

□ 학습·복지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대기업·금융기관과 중소기업 연계 학습체제 지원단(중소기업 활성화 인턴제도)
- 지역사회 학습·보육 도우미 체제(대학생, 주부, 중노년 자원봉사제)
- 도·농 연계를 위한 경영지원 및 농촌문화 서포터즈(농활인턴제도)

다. 건강사회 실현

□ 불법 장시간 노동 해소 국민운동 전개

- 언론, 시민사회, 기업에서의 공동노력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 실시